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분부는 20○○. ○. ○○.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구 ○○로 ○○○ 소재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위 주유소는 20○○. ○. ○.부터 20○○. ○. ○.까지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용 휘발유1호 ○○kl, 자동차용 경유 ○○kl를 공급받고 입하량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 ○. ○○.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분부로부터 이 사건 위반사실을 통보받았고, 20○○. ○. ○○.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태료 ○○만 원 부과 및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 ○. ○○. 석유사업법 제3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만 원(20% 감경 적용 시 ○○만 원) 부과하였고, 20○○. ○. ○○.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20○○. ○. ○○. ~ 20○○. ○. ○○.)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〇〇. 〇. 〇〇.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〇〇. 〇. 〇.부터 같은 해 〇. 〇.까지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용 휘발유 1호 〇〇kl, 자동차용 경유 〇〇kl를 공급받고 입하량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20〇〇. 〇. 〇〇.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과태료 〇〇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청구인이 또 다시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절차상·형식상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〇〇. 〇. 〇〇. 청구인에게 과태료 〇〇만 원 부과 및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〇〇. 〇. 〇〇.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〇〇. 〇. 〇〇. 과태료 〇〇만 원(20% 감경 적용 시 〇〇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20〇〇. 〇. 〇〇.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석유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제출서로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고 검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형식상의 흠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언급한 과태료 처분은 석유사업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

(거래상황기록부 거짓보고)에 대하여 제49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부과한 처분이고, 이 사건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대하여 제13조 제4항 제8호, 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행정적 제재를 본질로 하는 행정처분은 과태료 납부 여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 ○○○ 소재 ‘○○○○○○주유소’의 대표자이다.

2)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 ○. ○○.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청구인이 20○○. ○. ○.부터 20○○. ○. ○.까지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용 휘발유1호 ○○kl, 자동차용 경유 ○○kl를 공급받고 입하량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3) 피청구인은 20○○. ○. ○○.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유소에

대한 이 사건 위반사실을 통보받았고, 20〇〇. 〇. 〇〇. 청구인에게 과태료 〇〇만 원 부과 및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〇〇. 〇. 〇〇.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〇〇. 〇. 〇〇. 과태료 〇〇만 원(20% 감경 적용 시 〇〇만 원) 부과하였고, 20〇〇. 〇. 〇〇.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〇〇. 〇. 〇〇.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은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4항제8호에서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사업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 [별표 2]에서는 ‘과징금 부과 금액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로 과징금을 산정한다고 정하면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의 기준금액인 1천 5백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기준금액을 부과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등 일정한 경우에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 제40조는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제2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석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인허가 등의 취소,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납부한 과태료 ○○만 원은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석유사업법 제38조 제1항 위반(입하량 누락하여 거짓으로 보고)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계속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사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과태료 ○○만 원을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 제4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3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 ○○. ○○.경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였고 약 4개월이 경과한 20○○. ○.경 이 사건 위반행위로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미숙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위반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